

## 자주통일의 길

조국광복60년, 4월혁명45주년 논집 2005

- 발행처 : 사월혁명회
- 발행일 : 2005년 4월 15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 한국 노동운동의 발자취

이 원 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1. 들어가는 말

노동운동이란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처지를 바꾸어가기 위한 운동이다. 자본주의사회란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양대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이다.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는 보다 많은 이윤을 올리기 위해 싼값으로 노동력을 사들여 최대한으로 일을 많이 시키고 그 성과물을 차지한다. 그에 반해 노동자는 신분상으로는 자유이지만 아무런 생존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 팔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며 실제로 생산활동을 하면서도 그 성과물은 전혀 손을 댈 수 없다. 그 때문에 자본주의사회가 들어서면 곧바로 자본가들의 무자비한 수탈과 착취로 인해 노동문제가 발생하고 노동자들은 생존 그 자체를 위해 자본가와 싸울 수밖에 없게 된다. 나아가 노동자들의 싸움에는 언제든지 국가권력이 개입하여 노동자들을 억압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싸울 수밖에 없게 된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격화하면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통제 억압 착취하는 방식을 바꾸어가고 노동자들은 다시 이에 대항하여 싸운다. 자본주의사회의 역사는 바로 자본가와 노동자의 끊임없는 대립과 투쟁의 과정이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초기에는 생존 그 자체를 위한 본능적이고 개별적 분산적인 형태를 띠지만 노동자수가 늘어나고 투쟁의 경험과 자각이 높아지면서 투쟁·조직·이념을 발전시켜간다. 노동자들은 자본가에 대한 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경제투쟁과, 국가권력을 상대로 한 제도 정책투쟁이나 선거투쟁, 정당을 통한 권력탈취와 같은 정치투쟁을 결합시켜 발전시킨다. 또한 노동자들은 보다 강한 단결력과 투쟁력을 갖기 위해 공제조합, 노동조합, 교육단체, 노동자정당, 민족통일전선 등

다양한 조직방식을 발전 시켜간다. 이와 함께 자본가들의 이데올로기를 격파하면서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 어떤 사회를 건설할 것인가에 여러 가지 이념들을 제시하게 된다.

이와 같이 노동운동이란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양대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들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위를 개선 향상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단결하여 집단적 조직적 지속적 대중적으로 투쟁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모든 나라에서 똑같은 형태나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역사 발전단계나 자본의 운동방식 등 객관적 제약조건에 대응하여 달리 나타난다. 이 때문에 각국 노동운동은 각기 다른 특징을 지니면서 전개되는데 크게 보면 선진 자본주의 제국과 제3세계 노동운동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선진 자본주의 제국 노동자들은 자기 나라 자본가와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싸우면 되지만 제3세계 국가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선진 자본주의 제국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도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제3세계 노동자들에 비해 남북분단이라는 또 하나의 제약조건을 안고 있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약 100년의 역사를 지닌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노동운동은 오로지 노동력에만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 노동자계급이 자본의 지배를 극복하고 평등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단결과 투쟁의 과정이며 노동운동사는 바로 이 노동자 계급의 삶과 단결과 투쟁의 발자취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노동운동사를 공부해야 하는가? 그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이다. 오늘날 우리 노동자들의 지위는 어디까지 와 있으며 노동운동의 역량은 어느 정도 성장한 것일까? 노동조합운동이 목표로 하는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지위의 향상은 어디까지 이룩되었을까? 오늘날의 성과를 이루기까지 노동자들은 어떻게 싸워 왔으며 오늘의 성과를 이룩한 원인은 무엇이고 이제 노동운동은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

곧 노동운동사를 보는 이유는 오늘의 운동을 더 잘하기 위해서이다. 모든 사회현상이 그러하듯이 어제 없는 오늘은 있을 수 없고 오늘 없는 내일을 얘기할 수 없다. 더욱이 노동운동의 성과가 오랫동안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힘과 투쟁으로 일구어 낸 것이라면 과거의 경험은 노동자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다. 좋은 것은 계승하고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오늘 그것을 고쳐야만 노동운동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운동사를 보는 또 하나의 이유는 내일의 운동의 발전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이다. 노동운동은 패배와 승리, 침체와 고양, 정체와 비약의 과정을 되풀이하면

서 발전해왔다. 이것은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노동운동을 통해 바로 이러한 역사발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운동에 정진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 2. 임금노동자의 출현과 투쟁

우리나라에 노동자가 출현한 것은 대체로 18세기 말경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선 봉건시대 농경사회인 당시 적은 토지와 봉건귀족, 양반, 지주들의 가렴주구로 생계마저 유지하기 어려운 농민들이 적은 보수라도 받으려고 광산이나 수공업분야에서 일하기도 하고 관청의 일을 해주고 품삯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남의 일을 해주고 품삯을 받았다는 점에서 임금노동자들이었다. 그러나 당시 이들을 대량으로 고용할 자본가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또한 이들은 여전히 토지에 얽매어 있었으며 신분상으로도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근대적인 임금노동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876년 강화도 수호조약 체결을 계기로 일본자본주의가 침투하면서 부터이었다. 일본자본은 개항된 항구를 통해 근대적인 공업상품을 들여보냄으로써 조선의 수공업을 몰락시키고 식량을 수입해갔다. 일본자본의 침투는 1894년 동학농민항쟁과 청일전쟁을 거치면서 더욱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조선에는 자본주의 상품경제가 확산되고 봉건사회는 급격히 붕괴되어갔다. 일본자본의 침투와 양반 지주들의 혹독한 착취 때문에 생계에 허덕이던 농민들은 농촌을 떠나 일본자본에 의해 추진되는 철도부설, 광산채굴, 벌목사업, 부두하역장에 몰려들었다.

이들 노동자들은 산 속에 토막을 짓거나 빈민촌을 이루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처음 계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 광산과 부두 등지에서 투쟁하였다. 이 투쟁들은 대부분 봉건관료와 외국자본가의 수탈이나 현장관리자들의 폭행에 견디다 못해 폭발한 것으로 자연발생적이고 고립 분산적이며 비조직적인 투쟁들이었다. 이러한 투쟁을 거치면서 1898년 성진에 최초의 부두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 3. 일제하 노동운동

1910년 조선을 강탈한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을 식량공급기지와 상품판매시장으로 편입시켰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1912~1918년)을 벌여 대량의 토지를 빼앗아 일본지주들과 봉건지주들에게 불하하였고 대량의 상품유입으로 자급자족형태의 농촌경제를 파괴하였다. 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지주의 소작인으로 전락하거나 살길을 찾아 광산, 부두 하역장, 철도부설작업장 또는 공장지대에 모여들었으며 만주 등 해외로 떠난 사람도 많았다. 일제 자본의 상륙과 함께 사업장이 늘어났지만 그보다는 노동자수가 훨씬 많았다. 이 점을 이용하여 일제자본은 기아임금과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통해 노동자를 착취하고 자본을 축적하였다. 이에 대해 노동자들은 노동자수의 증가와 열악한 노동조건을 배경으로 다양한 조직을 만들어 임금인상 등을 내걸고 쟁의를 전개하였다. 1912년 6건에 1,573명이 참가했던 쟁의는 매년 급증하여 1918년 50건에 6,105명에 이르렀고 3.1만세운동이 일어난 1919년에는 84건에 9,011명이 참가하였다. 특히 노동자들은 3.1만세운동에 파업과 시위투쟁, 공장점거 등으로 적극 참가하였다.

1920년대에 들어 일제자본의 적극적인 진출과 ‘문화통치’를 배경으로 노동자수는 크게 증가하고 노동자들의 투쟁은 보다 조직적이고 강인한 양상을 나타냈다. 노동자수는 1920년대 초 10만에서 1929년 100만 이상으로 급증하였고 그 가운데 공장노동자는 55,000명에서 93,000명으로 늘어났다. 직능별 지역별 사업장별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가 1920년의 33개에서 1929년에는 473개로 크게 늘어나고 전국적인 산업별노조형태도 출현하였다. 이를 토대로 노동자들은 지식인의 주선 하에 전국조직인 조선노동공제회와 노동대회(1920)를 결성하였고 조선노동연합회(1922), 조선노농총동맹(1924), 조선노동총동맹(1925) 등으로 발전시켰다. 이들 전국조직의 이념은 처음 상호부조적 계몽적인 것에서 점차 계급투쟁적인 경향으로 발전하였다. 이 전국조직들은 지역적 사업장별 투쟁을 적극 지원 지도하면서 1923년에는 최초의 메이데이행사를 벌이는 등 노동자계급의 전국적 결집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노동자들은 1921년의 부산부두 총파업에서 석 달간이나 진행되었던 1929년 원산 총파업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노동자들은 임금인상, 임금인하, 해고, 민족차별, 인권탄압 반대 등을 요구조건으로 내세우고 직능별 지역별 연대파업을 통해 자본가들과 일본경찰의 탄압에 완강히 맞섬으로써 민족해방투쟁의 성격으로 발전시켜 갔다.

1930년대에 들어서자 일제는 세계 대공황의 타격을 벗어나고 중국을 침공하기

위하여 노동운동을 탄압하였다. 이에 노동자들은 지하조직을 만들어 사회주의 혁명운동과 결합하고 파업, 공장점거, 경찰서 습격 등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대항하였다. 1940년대 더욱 심해진 일제의 탄압 아래서 노동조합은 적색노조가 지배하였고 노동자들은 파업 이외에 태업을 주요한 투쟁수단으로 삼으면서 집단 직장이탈, 징용기피, 관공서 습격과 폭행으로 일제에 대항하였고 일부는 국경 부근의 무장독립투쟁에 합류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일제하 노동자들의 투쟁은 일제의 혹심한 수탈과 착취 탄압 아래서 초기의 고립분산적인 생존권투쟁으로부터 조직적이고 의식적인 민족해방투쟁 및 사회주의운동으로 변화, 발전하였으며 조직형태도 사업장별 직능별 지역별 산업별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 4. 민족해방과 노동운동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연합군에 항복하자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으나 국토는 남북으로 분단되고 남한에는 일제 대신 미군정이 들어섰다. 노동자들은 생산중단과 생활물자의 절대부족, 엄청난 물가폭등 속에서 조직을 만들고 일제의 공장과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며 생산을 재개하였다. 또한 일제하에서 노동운동을 주도해왔던 사회주의 세력은 앞으로 독립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대중적 조직기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전국적인 노동조합 조직건설에 착수하여 1945년 11월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를 결성하였다. 당시 전평에 참가한 조직은 남북한을 합쳐 1,194개이었고 조합원은 50만 명에 이르렀다. 전평은 노동자들을 15개의 산업별로 묶은 산별노조로 결집시키고 경제적 일상투쟁과 정치투쟁의 결합을 전술로 표방하며 친일과 민족반역자를 제외한 진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민족통일전선정권 수립에 적극 참가를 강령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민족자주정부를 부정하고 조선총독부의 통치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노동자들의 자주관리를 금지시키고 노동쟁의를 강제중재방식으로 바꿈으로써 노동운동을 억압하였다. 또한 미군정은 미국의 반소 냉전정책의 강화에 따라 남한의 노동운동을 장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선공산당의 지지기반으로서 정치적으로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는 전평을 억압하기 시작하였다. 그 일환으로 미군정은 전평을 타도하기 위한 반공청년단 간부를 중심으로 1946년 3월 10일 대한독립촉성노동총동맹을 발족시켰다.

이처럼 전평에 대한 미군정의 억압이 가중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1946년 9월 서울 철도국 노동자들의 투쟁이 폭발하였다. 전국적으로 동정과업과 동맹휴학이 이어지고 10월 1일 대구 인민봉기가 전개되었다. 이에 대하여 미군정은 경찰과 대한노총 간부, 청년단 등을 동원하여 파업단을 공격하고 간부 16명과 노동자 1,200여명을 검거하여 진압하였다. 이로부터 전평은 미군정에 대한 전면대결로 전환하고 1947년 3월 구속자 석방, 경찰의 민주화 등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24시간 시한부 총파업을 전개하였다. 전평은 두 차례 총파업에서 연인원 60만 명에 2,388건의 쟁의를 일으켰으나 피살자 26명, 구속자 8천여 명, 해고자 16만 명이라는 피해를 입은 채 미군정의 탄압으로 타격을 입게 되고 1947년 8월에는 미군정 포고령에 의해 불법화되었다. 그러나 전평은 이에 굴치 않고 1948년 2월, 남한 단독선거를 치르기 위한 유엔한국위원단의 방한을 반대하여 총파업을 전개하였다. 이 파업은 전국 주요산업도시에서 200만 명 이상이 참가하여 3,479명이 구속되고 경찰 5명과 시위대 28명 죽을 만큼 격렬하였다. 이어 전평은 미군정이 1948년 5월 10일 남한 단독선거를 강행하려 하자 이를 반대하여 5월 8일 ‘남조선단선단정반대 총파업’을 전개하였으나 결국 좌절되고 말았으며 이로써 전평은 남한에서의 노동운동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한 채 사실상 소멸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해방 이후 노동운동은, 비록 3년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미군정이라는 외세지배 아래 전평의 주도로 전개되었다. 이 시기 노동운동은 경제적 조건의 개선을 통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민족의 자주적 독립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전면적인 정치투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전평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세계적 규모의 냉전적 대립이라는 상황을 돌파하지 못하고 3년 만에 좌절되었다. 거기에는 전평이 미군정의 성격을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노동대중에 의해 자발적으로 진행되었던 ‘공장자주관리운동’의 폭발적 역량을 올바르게 지도하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대중적 지지기반을 약화시켰다는 점, 전평 탄압 이후 정치투쟁의 시기에 노동대중의 경제적 요구를 중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단위노조들을 통한 근로조건의 개선 등 대중적인 투쟁을 성과 있게 조직하는데도 실패하여 정치주의적 편향을 보였다는 점 등이 작용하였다.

## 5. 1950년대 노동운동

1948년 8월 15일 출범한 이승만 정권은 미국의 무상원조를 물질적 기초로 철저

한 친미 반공의 독재권력을 행사하였다. 이승만 정권은 미국의 지원을 배경으로 권력을 장악한 후 정치적 반대파와 사회운동을 철저히 억압하였다. 경제는 여전히 농업이 지배적이었고 일제가 남긴 공장이 남아 있었지만 1950년 이래 3년간의 한국 전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전쟁 후 정권은 농지개혁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농업경제는 미국의 잉여농산물 원조로 피폐상태에 처하여 절대적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방직, 밀가루, 설탕 등 미국의 무상원조에 의해 지탱된 소비재공업은 권력과 밀착된 몇 사람들로 구성된 관료독점자본이 지배하였고 미국의 원조자금은 권력의 유지에 충당됨으로써 이를 둘러싼 부정부패가 극심하였다. 이러한 취약한 정치 경제구조는 1955년 이후 미국이 달러위기를 배경으로 원조를 삭감시키자 곧 위기에 처하였다. 정권은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국민대중의 불만과 저항을 경찰력에 의한 억압과 부정선거로 막으려 했으나 1960년 4월혁명에 의해 붕괴되고 말았다.

이러한 원조경제와 1인 독재체제 하에서 인구는 급증하고 농촌에는 과잉노동력이 넘치고 있었으며 도시에는 대량의 실업자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완전실업자는 1957년의 27만 7천명에서 1960년 43만 4천명으로 불어나고 있었으며 특히 노동운동의 주력부대인 공장노동자(5인 이상 업체)는 매년 감소하여 1960년에는 1943년 보다 3만여 명이 줄어든 23만 5천명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1953년 조선방직노동자들의 투쟁을 계기로 노동법이 민주적인 내용으로 제정되지만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들은 장래를 기약할 수 없는 실업과 극도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 고용 불안 속에 생존 그 자체를 위협받고 있었다. 그러나 전평을 타도하고 그 자리를 차지한 대한노총은 독재권력과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노동자들의 투쟁을 억압하였다. 대한노총에 의해 기업별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반공정책의 강화와 공업화의 부진으로 세력을 증대시키지 못하여 조합원수는 1959년까지 568개 노조에 28만 명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이러한 권력과 자본, 대한노총의 폭압 아래서 노동자들은 임금인상과 해고반대 등을 요구하여 전쟁기간 중에도 파업을 전개할 만큼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50년대 말 경제위기가 심화하면서 격화하였다. 1958년까지 40여건의 쟁의에 1만여 명 정도 참가했던 노동자들은 59년에는 95건에 5만여 명이 참가할 만큼 투쟁을 확대하여 이승만 독재정권의 몰락을 촉진시켰다.

한편 전평퇴진 후 노동조합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한 대한노총은 노동자의 권익향상이 아니라 이승만 정권의 충실한 지지기반 역할을 하였다. 대한노총의 위원장과 주요간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조직자체가 자유당 기간단체로 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대한노총은 이승만 정권에 대한 충성경쟁과 파벌싸움으로



일관하였으며 현장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는 배신과 기만, 협잡이 성행하였다. 이러한 대한노총의 반노동자적 행태는 중요한 쟁의 때마다 드러나게 되고 현장 노동자들의 불만과 불신이 누적되어 갔다. 노동자들의 저항은 대한노총에 반대하는 조직결성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1959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대표 김말룡) 결성으로 나타났다. 주로 대구지역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 조직은 대한노총 내 파벌싸움의 영향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기는 했지만 당시 541개 노조 중 311개 노조가 대한노총에서 탈퇴하여 이 조직에 가담할 의사를 보일 정도로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권력의 비호 하에 노동대중의 권익향상을 외면하고 반공정권의 하수인 역할에 치중했던 대한노총의 기반은 50년대 말 권력의 몰락과 함께 무너져 가기 시작했다.

## 6. 4월혁명과 노동운동의 폭발

1960년 4월 시민혁명의 성공으로 이승만 독재정권이 붕괴하자 자유로운 정치분위기 속에서 민중들은 가두시위와 집회를 통해 국가보안법의 철폐, 민족 자주성 확립과 남북통일에 대한 민중의 참여보장, 민중생존권의 옹호 등 사회적 변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은 민중들의 요구를 거부하며 미국의 냉전전략을 지탱하고자 함으로써 민중과 대립관계에 서 있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독재정권에 억눌려왔던 노동자들은 폭발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노동조합은 60년 한 해 동안 380여 개가 만들어져 연초의 569개에서 914개로 크게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최초로 교원노조와 은행 증권 등 사무직노조가 등장하였으며 일부 신문사에도 노조가 결성됨으로써 노동조합운동의 지평이 넓어졌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은 학생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수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인 규모로 결성된 교원노조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억압하였다. 교원노조는 끝내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1961년 5.16군사쿠데타 직후 용공세력으로 몰려 극심한 탄압을 받고 와해되었다.

노동자들은 한 해 동안 50년대 연평균 50건의 4배가 넘는 227건의 쟁의를 일으켰다. 노동자들은 사업장 내의 파업만이 아니라 집회와 시위 등 보다 적극적인 투쟁방식을 통해 대폭적인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쟁취하였다.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어용노조 간부퇴진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이 투쟁을 기초로 50년대 말 등장한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의 영향력은 증대하고 대한노총은 과거를 반성하며 새로운 전환을 천명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는 대한노총의 재편을 요구하였고 위기의식을 느낀 대한노총은 조직재편을 위한 통합대회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대한노총의 잔존세력은 여전히 완강하였으며 전국노동조합협의회는 아직 대세를 장악할 수준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대한노총의 민주적 재편은 수차의 회의와 논의에도 불구하고 끝내 성사되지 못한 채 5.16군사쿠데타를 맞게 되었다.

한편 4.19혁명 후 노동운동 가운데 특이한 것은 ‘전국실업자구호대책위원회’의 구성이었다. 이 위원회는 광범한 실업자대중에 대한 취업기회 보장과 사회보장을 요구하며 출범한 것으로 운동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활동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시도에서 끝나고 말았다.

이상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4.19혁명 후 노동운동은 정치적 변혁을 돌파구로 하여 폭발하여 대폭적인 노동조건 개선과 조직의 확대 및 노동조합의 민주화를 일정정도 쟁취해 냈다. 그러나 운동은 경제투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조직 내부의 변혁을 완결시키지 못한 채 군사쿠데타를 맞게 되었던 것이다.

## 7. 차관경제 하의 노동운동

1950년대 후반 미국은 달러위기와 신흥독립국의 반미경향의 확대 및 사회주의 국가의 발전이라는 상황에 직면하여 세계지배전략을 전환하고 있었다. 그 내용은 후진국에 무상원조를 줄이는 대신 차관에 의한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고 핵무기를 배경으로 동맹국에 보다 튼튼한 반공정권을 확립하는 한편 중소간의 분열을 촉진시켜 세계지배를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는 바로 이러한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 속에서 일어났다. 즉 남한에 대한 미국의 전략은 무상원조로부터 차관으로의 전환과 경제개발의 촉진, 방위비 부담의 일본 이관을 위한 한일간 국교재개, 국내의 민주화와 민족 자주와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민중의 요구를 저지할 수 있는 강력한 정권의 수립 등이었던 것이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서울에 진입한 박정희 일파의 군부는 ‘반공을 국시’로 하는 혁명정부를 구성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군사정권은 5월 19일 임금과 물가의 동결 및 노동쟁의 금지령을 내리고 5월 23일에는 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사회단

체를 해산시켰다. 이후 정권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한일회담을 급속하게 추진하였다. 군사정권은 2년간의 군정기간 동안 중앙정보부의 공작과 3분폭리사건 및 4대의혹사건 등을 통해 정치적 기반을 마련한 후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민주공화당을 창설하여 지배권력을 유지하였다.

박정희 정권의 통치기조는 중앙정보부에 의한 공작정치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물질적 토대로 한 철저한 반공주의로서 미국의 한반도전략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두어졌다. 정권은 야당의 분열과 학생운동 및 사상운동의 탄압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반공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미일 독점자본을 끌어들여 경제개발을 추진하였다. 경제개발은 농업과 광업 등 기초산업을 소외시키고 공업화에 의한 수출증대라는 불균형 성장전략으로 일관하였으며 공업화는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자본 원자재 기술에 국내의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을 결합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었다. 이로부터 저농산물가격정책과 저임금정책은 경제개발의 충분조건으로 되었으며 경제개발전략에서 소외된 농촌경제는 피해를 거듭하여 대량의 이농을 통한 노동력의 창출 시장으로 전락하고 노동자들에게는 각종 제도적 통제가 강요되었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일본자본이 급격하게 진출하고 경제규모는 60년대 연평균 9%의 고도성장을 기록하였다. 급격한 공업화의 추진을 배경으로 임금노동자는 1963년의 238만에서 1970년의 373만 명으로 급증하고 특히 전체 노동자 가운데 제조업 노동자는 1963년의 7.9%에서 1970년의 13.2%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 질수록 해외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었으며 국내에서는 독점재벌의 형성과 부실기업의 대거 등장, 부익부 빈익빈으로 표현되는 소득불균형을 확대 심화시켰으며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이르러 해외시장조건이 악화하자 경제는 위기를 맞게 되고 국내의 각종 모순과 저항이 첨예하게 드러났다. 정권은 이러한 위기상황에 처하자 국가안보의 강화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내세워 정권연장을 획책하고 노동운동을 비롯한 정치적 사회적 저항을 억압하였다.

이처럼 객관적 조건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60년대 노동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4.19혁명 후 폭발적으로 고양되었던 노동운동은 군사정권에 의한 노동조합의 해산명령으로 일단 단절되었다가 군사정권에 의해 노동조합이 재편성되면서 다시 시작되었다. 1961년 5월 23일 노조해산명령을 내렸던 군사정권은 그 해 8월 자신들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별노조를 만들도록 허용하고 9명의 간부들을 지명하여 중앙정보부에서 훈련시킨 후 노조재건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9명의 재건위원들은 자신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 약 10일 만에 15개의 산업별노조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결성하였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자

발적인 의사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군사정권에 의해 철저히 위로부터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와 같이 군사정권이 강력한 중앙집중력을 가진 산별노조를 만들게 한 것은 노동조합 장악을 통해 대중적인 정치기반을 확보하고 저임금을 기초로 한 경제개발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 노동자의 저항을 노동자로 하여금 통제하기 위한 기구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군사정권은 50년대 말 대한노총의 관제 어용적 행태에 반발하여 등장한 '전국노동조합협의회'세력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노동조합법상 복수노조 금지규정을 두어 한국노총에 대한 도전을 차단하였다.

이와 함께 군사정권은 1963년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여 노동자들의 저항을 저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산별노조 통제하의 노동쟁의, 노동쟁의에 대한 적법판정제도, 노조운영에 대한 정부개입의 확대, 쟁의 냉각기간의 확대와 절차의 복잡화 등이 그것이었다.

이러한 제약조건 하에서 60년대 노동자들의 생활상태는 고도성장과는 반대로 악화하고 있었다. 임금은 음식물비에도 모자라는 수준이었고 주당 노동시간은 63년의 50.3시간에서 69년에는 59시간으로 늘어났으며 산업재해는 1964-69년 사이에 1,489건에서 38,442건으로 30배나 증가하였다. 또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1964-69년 사이 연평균 3.4% 증가에 그친 데 반해 노동생산성은 12.6%나 상승하여 소득분배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측은 60년대 후반 근로기준법의 개악과 집단적 관계법의 개정을 요구하며 노동조건을 저하시키고 노동조합운동을 억압하고자 하였으며 1970년에는 노동문제를 전담하는 경영자협의회(지금의 경총)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노동대책 수립에 나섰다.

60년대 노동운동은 군정이 끝나자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우선 조합원수는 1962년의 10만여 명에서 1969년에는 49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노동쟁의는 1963~69년간 연평균 105건에 17만 5천명이 참가할 정도로 폭발적인 양상을 보였다. 노동쟁의는 저임금으로 인한 생활난을 반영하여 임금인상요구가 주종을 이루었으며 그밖에 해고반대, 노조활동 보장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었다. 노동쟁의는 60년대 중반까지 관공기업분야와 외기노조가 주도하다가 후반기에는 제조업이 주종을 이루며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장기화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외자기업에서의 쟁의가 급증하였다. 이들 쟁의는 대부분 기업별로 제기되었지만 섬유노조의 면방쟁의와 같은 산업별 쟁의도 전개되었으며 정부를 상대로 한 제도 정책개선투쟁도 포함하고 있었는데 정부관리기업체의 보수통제법 폐기투쟁, 주유중탄정책반대투쟁, 자본시장육성법 반대투쟁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었다. 또한 섬유노조 산하 면방 생사업종에서는 전국적인 통일교섭과 총파업이 시도되기도 했으며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한 노동조합의 임금

이론이 등장하기도 했고 60년대 말에는 권력의 억압정책에 대하여 정치활동이 시도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년대 노동운동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첫째 권력에 의해 주어진 산별노조체제가 산하 조직의 운영과 쟁의에 대해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에 그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나 민주성을 확립하지 못했고 단체교섭도 대부분 기업별로 이루어짐으로써 실질적인 산별노조체제를 발전시키지 못했다. 이것은 노동조합이 군사정권이 당초 설정한 통제전략 안에서 활동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노총이 군사정권을 정치적으로 지지하고 이념을 정권이 요구한 대로 반공주의와 경제주의에 한정된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 활발하게 제기되었던 노동쟁의가 경제투쟁에 한정되었고 그마저도 파업건수는 전체 쟁의의 10%에 그쳤다는 점이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요구가 교섭과정에서 관철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적 과잉노동력의 존재와 정치권력의 억압에 눌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만 결과였다. 또한 제도 정책개선투쟁 역시 대부분 중도반단의 결과로 끝나고 말았으며, 60년대 말 정치활동 선언도 한국노총위원장이 집권당 전국구 의원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그침으로써 권력에 의해 주어진 조직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 8. 1970년대 노동운동

60년대 말 경제개발의 모순이 첨예화하고 권력기반이 동요하자 박정희 정권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가안보의 강화를 명분으로 가일층 독재체제를 강화하였다. 정권은 차관과 직접투자에 의한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고 3선개헌을 통해 장기집권의 길을 연 후 1972년에는 유신체제를 확립하였다. 독재정권은 60년대와 다름없이 외국자본에 국내의 저렴한 노동력을 결합시킨 공업화와 수출증대를 기조로 경제개발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한국경제는 연평균 10%가 훨씬 넘는 고도성장을 달성하였고 정부의 특혜에 의해 거대한 재벌이 형성되었으며 임금노동자는 1979년 652만 명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농촌이 더욱 피폐해지고 연이은 물가 폭등과 조세부담률의 증가로 서민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졌다. 정권은 외국자본과 국내 독점자본에 의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자기업에서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1970)으로 외자기업의 노동조합활동을

제한하고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이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1971)에 의해 노동기본권을 봉쇄하였으며 노동관계법 개정(1974)에 의해 노사협조를 강제하였다. 또한 유신체제 반대운동을 억누르기 위하여 9차례의 긴급조치 발동으로 국민기본권을 봉쇄하였다. 이와 같은 억압적인 제도 하에서 노동자들은 극심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열악한 작업환경, 인권탄압을 감내하면서 어려운 생존을 이어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운동의 총본산인 한국노총은 권력의 억압에 굴복하여 유신체제를 지지하고 노사협조주의정책에 순종함으로써 노동대중의 신뢰를 상실해가고 있었다.

이러한 삼엄한 제약조건을 뚫고 70년대 노동운동의 대전환을 예고한 것은 1970년 11월 13일 젊은 재단사 전태일의 항의 분신이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며 산화한 전태일의 절규는 고도성장의 허구성과 반인간적 노동정책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경제투쟁 대기업중심인 노동운동의 오류를 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에 무관심한 지식인과 사회여론에 노동문제의 심각성을 자각케 함으로써 노동운동의 전환을 촉진시킨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후 노동운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면서 전개되었다.

첫째,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극한적인 형태로 저항했다는 점으로 전태일의 분신에 이은 조선히텔 이상찬의 분신자살 기도(1970.11.15), 아세아자동차 노조분회장의 고압선 항의(1970.12) 한국회관 종업원 김차호의 프로판 가스 폭발위협(1971.2), 조일철강사 최재형의 자살기도(1973.12), 대구 정세달의 사장의 횡포에 대한 자살항의(1972)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둘째, 노동자·서민대중들이 자연발생적 폭력적 성격의 투쟁을 전개한 것으로 경기도 광주단지주민의 토지유상불하에 항의한 시위(1970.8), 한진상사 파월기술자들의 본사건물 방화시위(1971.9), 울산 현대조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개선을 요구하여 벌인 대규모 투쟁(1974.9), 사우디아라비아 파견 현대건설노동자들의 대우개선 요구 폭동(1978. 11) 등이 있었다.

셋째, 70년대 초 노동쟁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이 불법화된 유신체제 하에서도 매년 100건 이상의 파업과 단체행동이 전개되었다. 노동자들은 주로 임금인상, 체불임금 지급, 노조활동 보장, 해고 반대, 기타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 태업, 잔업거부, 중식거부, 리본달기, 노래부르기, 시위, 농성, 단식투쟁 등 다양한 전술을 활용하였다. 또한 노동자들은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권력과 직접 대항하여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으며(1977 청계피복노조 노동교실 쟁취투쟁), 기존노조에 대항하여 자발적인 행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는데 예

컨대 삼립식품 파업(1973), 방림방적 체불임금지급요구(1977), 인선사유령노조사건(1977), 진로노동자 파업(1978)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넷째, 상급 노동조합이 권력과 자본의 억압에 굴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조직은 1970년의 49만에서 1979년의 11만 명으로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각급 조직이 신규조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수호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선택할 만큼 의식이 향상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노동자들은 신규조직과정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항하여 싸웠을 뿐 아니라 권력과 상급조직의 횡포에 대항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는바 신진자동차(1971), 삼원섬유(1973), 반도상사(1974), 인선사(1977) 노조의 투쟁이 여기에 속한다.

다섯째, 지식인과 종교계의 노동운동 참여가 활발하게 진전되었다는 점이다. 전태일의 분신에 항의하여 학생들이 시위를 전개하고 대학연구소들이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벌였으며 1974년에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 신문에 노조가 결성되었고 70년대 중반부터는 일부 지식인들이 현장이나 노동조합에 투신하기도 하였다. 이 가운데 신문사노조들은 권력과 자본에 의해 혹독한 탄압을 당하지만 이에 굴치 않고 언론자유화운동으로 발전시켜 반유신투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도시산업선교회와 가톨릭노동청년회 등은 주로 경인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노동자들을 계몽하고 투쟁을 지원하며 한국노총의 각성을 촉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으며 마침내는 한국노총과 권력으로부터 '불순세력'으로 지목되어 탄압을 받았다.

여섯째, 노조조직 내의 민주화투쟁을 통해 민주노조진영이 형성된 점이다. 이 투쟁은 한국(원풍)모방노조 민주화투쟁(1972)과 동일방직노조 사수투쟁(1977)처럼 기존노조 내부에서 벌어지기도 했지만 반도상사노조, YH노조, 콘트롤데이터노조, 청계피복노조 등 자주성과 민주성을 표방하여 권력과 자본 및 한국노총과 대립하기도 하였다. 이 노조들은 불법화된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감행하여 노동조건을 개선하려 함으로써 권력과 자본 및 한국노총으로부터 혹독한 탄압을 받게 되지만 내부 조직력과 상호 지원에 의해 조직을 지켜나갔다.

일곱째, 초보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연대투쟁과 정치투쟁이 출현한 것으로 1977년 협신공업사 노동자 민중진의 가스질식사에 항의하여 경인지역노조 간부들이 항의시위를 벌인 사건, 공정방송을 요구하여 여러 개 회사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기독교방송국을 점거한 사건과 서울 여의도 부활절 행사장에서 시위를 벌인 사건(1978), YH노동자들의 신민당사 농성사건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김경숙이

라는 여성노동자가 사망한 YH노동자들의 투쟁은 당초 회사폐업반대투쟁으로 시작하였지만 유신독재정권과 야당간의 대립을 촉발시키고 마침내는 유신권력 내부의 암투를 야기시켜 유신정권을 몰락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이 전태일의 분신으로 새로운 전환이 예고되었던 70년대 노동운동은 권력과 자본의 삼엄한 억압과 한국노총의 왜곡된 운동노선에도 불구하고 기층 노동자들의 치열한 투쟁과 운동지형의 확대라는 발전적인 양상을 보여주었다. 특히 민주노조진영의 형성은 연대조직틀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하고 투쟁도 경제투쟁에 머물렀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자주성과 민주성이라는 노동운동의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새로운 전진을 준비하고 있었다.

## 9. 1980년대 초 · 중반의 노동운동

1979년 10월 유신독재체제의 붕괴로 정치적 자유는 회복되었지만 경제는 제2차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였다. 경기는 급격히 침체하여 실업률이 높아지고 물가가 폭등함으로써 저임금에 시달려온 노동자들의 생활압박은 더욱 가중되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지배권력은 1980년 ‘서울의 봄’에 이은 5.18 광주 민주항쟁을 계기로 민중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을 가하고 마침내 전두환 군부독재정권을 수립하였다. 전두환 정권은 유신시대에 버금가는 광폭한 독재권력을 행사했지만 민중들의 거센 민주화투쟁에 굴복하여 1987년 6.29항복선언을 끝으로 물러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시기 노동운동은 80년 5.17 신군부의 쿠데타 이전의 비조직적 폭발시기와 그 이후 83년 말까지의 운동의 전반적 후퇴와 재정비시기, 84~87년 6월까지에 이르는 운동의 침체극복과 변혁지향노선의 대두시기 등으로 나누어진다.

70년대 노동자계급의 잠재적으로 축적된 역량이 폭발적으로 분출되었던 80년 초 노동자투쟁은 총 2,168건으로 급증하면서 매우 격렬한 양상을 나타냈다. 노동자들의 요구조건은 임금인상과 체불임금 청산, 어용노조민주화와 노조결성보장, 휴폐업 반대 및 해고자 복직, 기타 노동조건 개선 등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투쟁은 파업·태업·농성·시위 등 탈법적 형태를 나타냈고 그밖에 지역집거, 경찰과의 직접 대결, 공장파괴 등 격렬한 투쟁도 전개되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임금인상투쟁사례로는 청계피복노조의 임금인상 농성, 동국제강 노동자들의 파업농성, 강원도 사북



동원탄좌 광부들의 대파업과 시위, 인천제철노동자들의 파업 등이 있었다. 어용노조 민주화투쟁은 다른 조건들과 복합적으로 제기되었으며 그 범위는 한국노총과 산별노조 등 상급노조로부터 단위노조에까지 광범하게 확산되었고 휴폐업저지 및 해고반대투쟁으로는 동명목재 3천여 노동자의 장기적인 농성 시위, 한구교삼양공업에서의 집단해고 반대투쟁, 주한미군노조의 인원감축반대농성 등이 있었다. 대표적인 해고노동자 복직투쟁으로는 동일방직, 호남전기,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투쟁을 들 수 있다.

이 시기 노동운동은 그 격렬성에도 불구하고 자연발생적이고 비조직적 성격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요구내용이나 투쟁도 경제적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또한 투쟁의 전개도 사업장 단위에 한정되고 산업별, 지역별 연대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자들의 폭발적인 투쟁은 5.17쿠데타와 더불어 취해진 극심한 탄압조치에 의해 단절되고 운동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군부정권은 신규조직을 금지시키고 사회정화라는 이름으로 한국노총위원장 등 상급단체의 어용간부들과 민주노조간부를 포함한 191명을 강제 사퇴시킴과 함께 105개의 지역지부를 해산하였다. 또한 정권은 민주노조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순화교육을 보내는가 하면 청계피복, 원풍모방, 콘트롤데이터 등 민주노조들을 폭력적으로 파괴하였고 노동관계법을 전면 개악하여 운동의 발전을 차단하였다. 80년 12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개악된 노동법 주요내용은 ①기업별노조의 강제 ②복수노조 금지조항의 강화 ③제3자개입금지조항의 신설 ④유니온 슝 조항의 폐지 ⑤노조간부자격의 제한 ⑥단체협약유효기간의 연장 ⑦노동쟁의 냉각기간의 연장 ⑧변형근로시간제의 신설 ⑨노조운영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확대 등 사실상 노조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들이었다.

이러한 군부정권의 극심한 탄압 아래 한국노총은 여전히 무기력한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노동운동은 1983년까지 침체양상을 보였으나 노동자들은 절박한 생활상의 요구와 노조결성 보장요구를 중심으로 꾸준히 노동쟁의(1981년 186건, 1983년 98건)를 제기하고 소수이기는 하지만 신규조직도 확대하였다. 또한 일부 지식인과 현장활동가 사이에서는 광주민중항쟁과 70년대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자기반성을 토대로 새로운 운동이념과 투쟁형태를 고민하면서 비합법적인 조직구성이 모색되기도 했다.

84년 이후 정치정세의 변화와 함께 노동운동은 상승국면으로 전환하였다. 84년 5월 대구 택시기사들은 사납금 인하, 부제완화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와 농성을 전개하여 목표를 관철시키고 이 투쟁을 전국 대도시로 확산시켰다. 1985년 4월

대우자동차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제치고 임금인상을 위한 총파업투쟁을 전개하였고 6월에는 서울 구로공단지역에서 구속된 노조간부 석방, 노동법의 악법조항 철폐, 부당해고자 복직, 임금동결정책 철회, 최저생계비 보장 등을 요구하며 9개 노조가 동맹파업을 벌였다. 또한 노동자들은 신규노조 결성투쟁과 어용노조민주화투쟁을 벌이는 한편 제도개선 요구투쟁을 아울러 전개하였다. 83년 말부터 시작된 해고 노동자들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철폐투쟁, 84년 9~10월의 청계피복노조 합법성쟁취투쟁, 84년 이후의 노동법 개정운동과 이른바 ‘위장취업자’의 해고무효 확인투쟁 등이 그것이었다.

이와 함께 노동자들과 지식인들은 자주적 운동단체를 구성하여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한편 변혁지향적 운동노선을 설정하고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였는바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84.3),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85.2), 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85.4), 서울노동운동연합(85.8) 등이 그 대표적인 운동단체들이었다. 한편 노동현장에 대거 투신한 지식인 노동자들은 관념적 정치투쟁 편향 등의 한계를 나타내는 하였지만 노조결성과 어용노조 민주화를 위한 투쟁, 자주적 운동단체 결성과 활동을 지원하거나 주도한 일에서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치열한 투쟁들이 날로 격화하는 민주화투쟁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면서 군부독재정권의 완강한 벽을 허물어뜨리고 새로운 전진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이 나라 노동조합운동의 총본산이라 일컬어지는 한국노총은 4.13호헌 지지성명을 내는 등 도도한 역사의 전환을 거스르고 있었다.

## 10. 1987년 7~9월 대투쟁과 민주노조운동의 발전

1987년 6.29선언 후 정치권과 민주화운동세력이 주춤해져 있는 사이에 맨 먼저 투쟁의 불길을 당긴 것은 노동자들이었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7월 5일 울산 현대엔진노동자들의 노조결성과 파업투쟁을 기점으로 현대그룹 전체로 확산되었다. 투쟁은 울산에서 인근 부산, 마산, 창원 등지로 확대되었다. 현대그룹노조협의회가 결성되고 대우조선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간 8월 초부터 노동자들의 투쟁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투쟁의 확산경로는 독점자본의 전략적 공업기지인 남동해안공업지대로부터 구미, 대구, 포항을 거쳐 내륙의 중부 광산지대, 호남, 중부의 경공업지역을 휩쓸며 수도권지역으로 이어졌다. 투쟁은 주로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직장내의 억압철폐 등을 요구조건으로 하여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화학공업에서 경공

업으로, 광공업에서 운수, 부두, 선원, 그리고 사무직, 전문직, 판매서비스직 등 전 산업으로 파급되어 8월 중순 들어 전국은 노동자의 파업 농성으로 뒤덮이기에 이르렀다. 8월 17일 울산 현대그룹 4만 노동자의 가두시위에서 정점에 오른 노동자 투쟁은 8월 22일 거제 대우조선 노동자의 피살사건 이후 더욱 격렬해졌다. 이에 당초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국가권력은 언론조작으로 물리적 개입의 구실을 만든 뒤 9월 초부터 역공을 개시, 9월 4일 현대중공업과 대우자동차의 농성현장을 공격하여 파업참가자를 대거 체포하였다. 이로부터 중소기업과 비제조업분야 노동자들의 투쟁이 확산되는 속에서 주요 대공장 노동자들의 투쟁은 진정추세를 보였고 대통령 선거바람이 불기 시작한 9월 하순에는 전반적으로 가라앉았다.

거의 석 달에 가까운 노동자대투쟁은 전면적인 대중적 운동이었다. 6월 29일 이후 3개월간 투쟁건수는 3,458건이었으며 수백만의 노동자가 참가하였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투쟁건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았으며 투쟁의 절정기에는 하루의 투쟁건수가 예년의 몇 해 동안 발생한 분규건수보다 많았다. 그야말로 ‘십년을 하루에 뛰어넘은’ 거대한 대중운동의 비약이었다. 투쟁은 또한 군부독재정권 하의 억압적 법질서를 대중의 단결된 힘으로 돌파하는 전투적인 성격을 띠었다. 쟁의는 거의 전부가 법의 테두리를 뛰어넘는 불법파업이었으며 단체행동을 제약하던 여러 법조항들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은 쟁의발생신고나 냉각기간 따위를 무시하고 우선 현장을 점거하고 파업 농성을 병행한 뒤 협상에 임했고 가두시위와 같은 적극적인 형태도 구사하였다. 또한 노동자들은 이 투쟁과정에서 신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기존의 어용노조를 타도하면서 스스로를 ‘민주노조’로 지칭하기도 하였다. 대투쟁은 대규모 사업장, 주로 재벌기업에 속한 조선, 자동차 기계 방위산업 등 중화학공업의 남성노동자들이 주도함으로써 노동운동의 주도세력이 자본의 전략적인 산업부문으로 옮겨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이 87년 노동항쟁은 한국에서 노동자계급이 형성된 이래 최대 규모의 대중적 항쟁이었다. 대투쟁은 광범위한 노동자들을 단련시키고 의식과 조직을 발전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노동자 대중이 스스로 투쟁의 전면에 나섬으로써 자신들을 억압하는 체제와 각종 제도의 구조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힘과 단결의 의미를 자각함으로써 사회적 무력감이나 패배주의를 상당한 정도로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투쟁과정을 통해 조직적 지도력의 중요성과 연대의 필요성도 깨닫게 되었다.

노동자들은 이 대항쟁을 통해 정치적 진출을 위한 대중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노동자들은 투쟁과정에 개입한 정치권력의 정치적 탄압을 경험하면서 정치적

의식을 높일 수 있었다. 즉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투쟁이 총자본과의 계급적 이해관계 대립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노동자들은 투쟁을 거치면서 이 사회의 발전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전면에 등장하고 다른 부문 민중운동과의 결합가능성을 인식하면서 민족 민주운동에서 노동자계급에 맡겨진 역사적 책무를 낮은 차원에서나마 자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87년 노동항쟁은 이러한 성과와 의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보여주었다. 투쟁의 조직적 지도력이 취약하여 강고한 투쟁을 벌이고도 그것을 광범한 조직적 역량으로 결집시키지 못했다는 점, 투쟁방식에서 연대투쟁이나 통일투쟁이 전면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점, 투쟁목표에서는 단위 사업장내의 경제적 요구를 전 계급적 제도적 요구로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점, 민족 민주운동과의 상호 긴밀한 유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한계들은 87년 9월 이후 권력 및 자본과의 치열한 대립관계 속에서 노동자들 스스로에 의해 극복되어가기 시작하였다.

## 11. 민주노조운동의 발전

### 1) 민주노총의 건설

노동항쟁 이후 노동자계급의 첫 번째 시도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새로운 조직의 형성이었다. 87년 7월 이후 노동자들은 폭발적인 투쟁을 통해 대폭적인 임금인상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수많은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한편 일부 기존 노조에서는 노조민주화투쟁을 전개하였다. 노동조합은 86년의 2,675개에서 89년에는 7,883개로 3배 이상 늘어났고 조합원수는 103만 6천여 명에서 193만 2천여 명으로 급증하였으며 조직률은 12.3%에서 18.7%까지 올라갔다. 또한 노동조합은 제조업 생산직만이 아니라 사무 전문직 교사 및 교직원 언론 병원 건설 등 전 산업에 걸쳐 결성되었고 공공부문에도 급속히 확산되었다. 그러나 이들 노동조합들은 결성 후 곧 권력과 자본의 반격에 직면하여 노조간부 및 노동자들이 대량으로 해고 징계 연행 구속되거나 조직운영, 단체교섭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노동조합은 한국노총의 지도와 보호를 기대했지만 한국노총은 오랫동안 국가권력의 통제 아래 묶여 있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급격하게 고양되고 있는 대중적 운동을 수용하거나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권력이나 자본측의 탄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여기서 많은 노동조합들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자체조직의 수호에서부터 노조운영이나 노동조건 개선문제에 이르기까지 상호교류와 지원을 통해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호교류와 공동대응을 통한 연대들의 형성은 초기에 현실적으로 서로 접근이 용이한 지역·업종·그룹별 및 대기업연대라는 세 가지 경로로 진행되었고 권력과 자본의 탄압이 가중되면서 빠른 속도로 전국적인 연대와 통일을 이루어 나갔다. 각 공단의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를 중심의 지역조직들은 1990년 1월 한국노총에 대립하여 변혁을 지향하는 전국중앙조직으로서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결성의 주축이 되었고 사무금융·언론·병원·전문·건설·대학·민주출판·시설관리노조협의회 전교조 등은 90년 5월 구성된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업종회의)로 결집하였다. 또한 재벌그룹 노동조합들은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현총련)과 ‘대우그룹노조협의회’(대노협)를 구성하였고 이들을 주축으로 90년 12월에는 ‘대기업노동조합연대회의’(연대회의)를 구성하였다.

이들 지역·업종·그룹별 연대조직들은 매년 임금인상투쟁과 노동법 개정투쟁 그리고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권력과 자본의 탄압에 대응하는 상호 연대와 통일을 추진하였고 마침내는 1993년 12월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를 거쳐 1995년 11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결성하였다. 민주노총이 창설되기까지 권력과 자본은 자주적 민주적인 새로운 조직형성에 대해 무자비한 탄압을 가하였다. 이로 인해 95년까지 6천여 명의 노동자 및 노조간부들이 해고되었고 2천명 이상이 구속되었으며 수십 명이 죽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 연대성 이념성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완강한 항쟁을 계속하여 끝내 민주노총을 결성하였다. 한편 87년 이후 노동자대중의 노도와 같은 투쟁에 충격을 받은 한국노총은 1988년 말 ‘굴종과 예속의 역사를 청산하고 운동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하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93~94년에 들어 또다시 권력과 자본의 억압에 눌려 노-경총합의를 이름으로써 비자주적 비민주적인 구태를 재연하였다.

## 2) 투쟁의 고양과 전략 전술의 발전

87년 이후 노동자들은 경제적 조건의 향상과 민주적 제권리의 확보를 위해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노동쟁의는 1987~1989년 사이 3,749건~1,616건으로 폭발적으로 증대하였다가 90년 이후에는 300건 이하로 감소하고 있지만 쟁의기간의 장

기화 등 완강한 양상을 나타냈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권력과 자본의 지배전략에 커다란 타격을 가하면서 정세변화의 중요한 인자로 등장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다양한 투쟁형태와 전략 전술을 발전시켰다.

첫째, 투쟁주체의 변화와 확대를 배경으로 투쟁역량을 광범하게 확대하였다. 대부분의 투쟁은 독점적 대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생산현장 노동자들이 중심에 섰고 사무 전문 기술직종 노동자들이 광범하고 다양한 형태로 투쟁에 참여하였다. 대기업노동자들의 투쟁은 30대 재벌그룹의 주력기업에서 거의 매년 파업형태로 전개되었으며 요구내용도 임금인상에서부터 복지제도 개선, 인사위원회 참가, 해고반대 및 해고자 복지, 현장민주화 등을 내걸어 대폭적인 개선을 이룩하였다. 또한 사무 전문직노동자들은 신규조직 확대를 진전시키면서 언론민주화(방송 신문사), 연구자율성 보장(전문노련), 의료민주화(병원), 학원의 자주화 민주화(대학직원), 교육개혁(전교조)을 제기하였고 지하철 한국통신 조폐공사 철도 등 공기업에서도 노동조건 개선의 내세우며 악법조항의 제약을 뛰어넘어 파업투쟁을 전개하였다.

둘째, 노동조합의 주도하에 조직적 계획적으로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다양한 투쟁 전술을 구사하였다. 대부분의 노동조합들은 투쟁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준비에서 마무리까지 계획성과 규율성을 갖고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투쟁전술도 총파업에서부터 시한부 부분파업 태업 총회 농성 가두시위 준법투쟁 등 각기의 특수한 역량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셋째, 지역별 산업별 그룹별 연대투쟁을 확산시켰다. 이는 사업장별 투쟁이 갖는 취약성과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로서 임금인상, 노동탄압, 노동법개정 등 다양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지역조직, 산업별연맹 또는 협의회, 그룹조직을 중심으로 공동교섭, 공동투쟁, 연대투쟁이 전개되었다.

넷째,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결합을 진전시키면서 전국적 통일투쟁을 확대 강화하였다. 노동자들은 88년 이후 전국적 중앙조직을 준비하면서 노동법 개정투쟁, 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 임금억제정책 분쇄투쟁, 노동절 부활투쟁, 사회개혁투쟁 등 전체 노동자의 공통과제 해결을 위한 전국적 통일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국적 조직역량의 결집 필요성과 성과를 확인하고 전국중앙조직 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활동으로 발전시켜 갔다.

다섯째, 국가권력과 대결하여 완강하고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88년 이후 국가권력은 노동자투쟁이 장기화하거나 규모가 클 경우 어김없이 공권력을 행사하였으며 악법조항을 근거로 민주노조진영에 대한 대대적인 파괴책동과 이데올로기공세를 펼쳤다. 이에 대해 민주노조진영 노조들은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격렬히 저

항하였으며 많은 경우 실정법의 테두리를 뛰어넘어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같은 국가권력과 의 완강한 대결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권력의 본질을 인식케 함으로써 정치의식을 고양시키고 정치투쟁의 필요성을 확인시키는 계기를 이루었다.

### 3) 운동이념의 발전과 정치적 진출

1948년 이후 87년 이전 대한노총, 한국노총으로 대표되는 노동조합운동의 이념은 반공주의와 경제주의였으며 1991년 한국노총은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민주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노동조합주의’로 운동기조를 새로이 설정하였다. 이 운동기조에서 한국노총은 반공주의를 삭제했지만 계급투쟁적 운동을 배격함으로써 반공주의를 온존시키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경제적 조합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삼았다. 이에 비해 87년 대항쟁 이후 현실적으로 등장한 민주노조진영은 종래의 낡은 이념을 거부하고 변혁지향적인 이념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1991년 전노협의 창립선언문과 각 산별연맹의 선언 강령에서 두드러졌다.

전노협은 창립선언문에서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의 깃발을 높이 들어 이 땅에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밝히고 스스로를 “이제 한국노총으로 대표되는 노사협조주의와 어용적 비민주적 노동조합운동을 극복하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한국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조직적 주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전노협은 “경제적 이익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대중적인 노동조합운동을 전개하여…노동자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경제사회구조의 개혁과 조국의 민주화·자주화·평화적인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체민주세력과 굳게 연대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의 투쟁방향을 밝히고 조직적 목표로는 “업종별 산업별 공동투쟁과 통일투쟁을 발전시키는 속에서 기업별 노조체계를 타파하고 자주적인 산별노조의 전국중앙조직을 건설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한편 노동조합의 정치적 진출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조진영이 대비되면서 87년 대항쟁과 노동조합운동의 고양과 더불어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한국노총은 89년 9월 정치위원회를 설치하고 선거활동을 벌이는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흥사단 등과 함께 경제개혁추진 범국민대책회의,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우리쌀 지키기 범국민대책회의 등을 구성하고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등 종래의 폐쇄적인 태도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노총의 선거활동은 정치투쟁의 일환이 아니라 노조대표의 의회진출에 주안점이 두어져 있으며 시민운동과

의 연대는 기층민중운동이나 통일운동을 배제한 채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비해 민주노조진영의 정치적 진출은 대 권력투쟁, 정책 제도개선투쟁, 민족민주운동 참여 등을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전노협 탄압에 대한 투쟁, 각 연맹의 합법화투쟁, 노동법 개정투쟁, 임금억제정책 반대투쟁, 사회개혁 투쟁 등 민주노조진영이 전개한 투쟁들은 단순히 조직결성과 활동기반의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권력을 대상으로 한 정치투쟁의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 또한 민주노조진영은 민족민주운동에의 참여와 민족통일운동의 추진을 통해 정치적 진출을 시도하였다. 전노협, 전교조의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참가, 전노대의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민족회의) 공동대표 참가 및 농민, 빈민, 진보학계, 각종 노동운동단체와의 연대활동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들이었다. 이것은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과 민족의 자주적 통일의 주체로서 노동자계급이 나서야 한다는 역사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민주노조진영이 민주노총으로 결집해 가는 과정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한국노총은 1988년 개혁을 표방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였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타성을 벗어나지 못한 채 자주성과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나 노동자 대중의 현실적 요구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추진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한국노총은 산하 조직으로부터 신뢰성과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민주노조진영의 도전에 전전긍긍하면서 개혁을 서둘렀다.

## 12. 민주노총의 출범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에 접어들자 정부와 자본은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반격을 개시하였다. 전노협에 대해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고 파업장에는 무차별적인 공권력이 투입되었다. 1988~92년 사이에 1,973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었고 4,892명이 해고되었다. 급속한 시장개방 및 산업구조 조정과 정부의 탄압으로 조합원수는 감소세로 돌아서고 쟁의건수도 89년 1,616건을 고비로 90년 322건, 91년 234건, 92년 235건, 93년 144건, 94년 121건, 95년 88건, 96년 85건으로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투쟁은 더욱 완강해졌고 민주노조진영의 전진은 멈추어지지 않았다. 투쟁형태는 그 이전에 비해 훨씬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으며, 지역·업종·그룹별 연대투쟁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또한 기간산업부문에서의 대중투쟁이 확대되었으며 메이데이 투쟁과 같은 전국적 통일투쟁이 시도되어 그 결과



94년에는 근로자의 날(3.10일)이 5.1일로 대체되었다. 또한 정부와 자본측의 무단적인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노조진영의 전국적인 조직은 'ILO노동법개정공동대책위원회'를 거쳐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로 발전하여 1994년 11월 13일 '민주노총준비위원회'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민주노총준비위는 노동운동의 자주성, 민주성을 표방하고 기업별 노조체계의 타파와 산업별 단일노조를 중축으로 한 전국중앙조직의 건설을 내세웠다. 약 1년간의 준비 끝에 민주노조진영은 1995년 11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출범시켰다. 당시 민주노총은 861개 노조에 조합원은 41만이었고 초대위원장에는 권영길(언론노련 출신)이 선출되었다.

이렇게 민주노총이 출범하는 사이에 한국노총은 산하 조직으로부터 신뢰성과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해 93년 말부터 산하 조직의 잇따른 조직이탈로 큰 위기를 맞이하였다. 이 위기는 1994~95년 한국노총이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임금가이드라인에 합의함으로써 더욱 증폭되었다. 이른바 '노-경총합의'에 대해 한국노총 내부에서 큰 반발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한국노총 탈퇴운동이 급속히 확산됨으로써 한국노총의 세력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지도력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

민주노총이 출범하자 정부는 민주노총을 '불법 과격단체'로 규정하고 민주노총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고 권영길 위원장을 구속하는 등 탄압을 계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전국적인 중앙조직으로서 실질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그 결과 마침내 정부는 민주노총을 배척하는 정책으로부터 체제내로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한편 노사관계 개혁을 서둘렀다. 정부는 1996년 5월 출범시킨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 한국노총과 함께 민주노총 대표를 참가시키고 노동법 개정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노동법 개정협상은 노사간의 치열한 이해대립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정부와 신한국당은 자본가들의 요구대로 노동법을 개악하여 1996년 12월 26일 새벽 단 6분 만에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즉각 전국총파업에 나섰다. 총파업은 연인원 500만의 노동자가 참여한 가운데 96년 12월 26일부터 97년 2월 말까지 이어졌다. 노동법 개악기도에 반대해 오던 한국노총도 두 차례의 총파업을 단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과의 연대를 추진함으로써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세계 각국 노동조합의 연대 속에 전개된 총파업투쟁에 마침내 정부는 날치기 노동법 개정에 대해 국민에 사과하고 노동법 재개정을 약속하였다. 이후 국회에서 노동법 재개정을 위한 협상을 거쳐 3월 11일

새로운 노동법이 제정되었으나 그 내용은 중요한 부분에서 자본측의 이해를 반영함으로써 다시 노동조합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총파업 이후 민주노총은 97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개선투쟁과 사회개혁투쟁을 전개하면서 정치세력화를 위한 활동에 나섰다. 임단투는 4대목표(공동고섭 쟁취, 3자개입금지 무력화, 전임자축소저지와 임금감축 반대, 고용안정보장)와 재벌의 해체 등 15대 요구 쟁취에 중점이 두어졌다. 정치세력화는 98년 지자체 선거 진출-->98/99년 정당건설-->2000년 국회의원내진출을 경로로 설정하고 97년 말 대통령 선거에는 국민후보전술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민주노총은 운동전선체인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과 함께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21'를 결성하고 대통령 후보로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을 선출하였다. 한편 한국노총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기성 보수정당과의 '정책연합'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총은 300대 요구를 제기하고 이 요구를 가장 많이 받아들이고 당선 가능한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천명하였다.

### 13. 1996~97 총파업

한국의 노동법은 1953년 최초로 제정되었다. 그 이후 역대정권은 국가안보와 경제개발의 가속화라는 명분 아래 집단적 노동관계법을 수차례 개악하여 노동운동을 억압해 왔다. 이에 대해 노동자들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악법개정을 주요한 요구내용으로 10년 동안 줄기찬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이러한 투쟁의 성과로 노동악법개정에 대한 국내외의 요구가 거세어졌고 노동법개정은 한국사회의 핵심적 민주개혁과제의 하나로 부각되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정부는 '세계화시대에 걸맞은 신노사관계'의 구축을 목표로 하여 노동법개정에 착수하게 되었다. 노동법 개정작업은 96.5.9 대통령 자문기구로 구성된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노개위에서는 노동법개정을 둘러싸고 6개월간에 걸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정부와 사용자측은 단결의 자유보장은 최대한 제한하고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파견근로시간제 등 이른바 고용의 유연화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세를 폈고 각 대기업에서는 명예퇴직을 강요하는 등 감량경영 공세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노동법 개정안은 노사정간에 합의를 보지 못한 채 96.11.7 이후 정부로 이송되었고 96.12.3, 정부는 노개위 공익위원들의 개정안보다 훨씬 후퇴한 내용으로 개정

안을 의결했다. 12.10, 이 내용을 토대로 국무회의는 노동법개정안을 의결하여 14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회의에 제출하였다. 여당인 신한국당은 국회 회기종료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상임위에서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1996년 12월 26일 새벽 6시에 154명의 의원들을 끌어모아 단 6분 만에 안기부법 개정안과 노동법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 지령을 산하조직에 내렸고 이에 따라 자동차, 금속, 현충련, 전문노련 등에서 파업에 돌입하였다. 12월 26일 85개 노조 142,000여 명이 참가한 전국적 총파업은 매일 확대되어 28일에는 173개 노조 221,000여 명이 총파업에 참가하였고 31일까지 연인원 100만 명이 참가하였다. 노동자들은 총파업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노동법 날치기통과 규탄 및 총파업결의대회를 연일 열었다. 이 집회에는 26일 12개 지역 10만여 명, 27일 15개 지역 12만여 명, 28일 15개 지역 12만여 명, 30일 20개 지역 10만여 명이 참가하였다. 한편 한국노총은 27일 4시간 시한부파업을 지시하였다가 민주노총의 파업이 완강하고 대규모로 확대되고 정리해고제 등 노동법개악에 대한 대중적 반발이 거세다는 판단 아래 파업을 연말까지 연장하였다. 또한 지역별로 연일 집회를 열어 신한국당을 규탄하였다.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하자 사회운동단체들도 총파업투쟁에 가세하기 시작하였다. 96년 11월 20일에 사회운동단체들이 구성한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철폐와 민주기본권 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즉각 규탄성명을 내었고 민변, 민교협, 종교단체, 여성계 등에서 연이어 항의성명을 내고 농성에 돌입하였다. 여론조사 결과 날치기 통과에 대해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를 표시하였고 총파업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지지의사를 보였다. 또한 OECD노조자문위원회, ICFTU를 비롯하여 각국의 노동단체들이 날치기 통과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내고 총파업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사를 표명하여 왔다. 이처럼 노동자총파업이 전개되자 정부는 ‘근로자 생활향상과 고용조정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과 ‘불법파업가담자 사법처리’라는 강은 양면정책을 표명하면서 12월 30일 국회에서 넘어온 노동법개정안을 의결하였다.

97년 초 휴일이 지난 후 총파업은 더욱 확대되었다. 12월 30일 민주노총의 2단계 투쟁지침에 따라 1월 3일 자동차 금속 등 48개 노조 75,389명이 파업을 벌였고 1월 6일에는 사무노련, 병원노련 전문노련, 화학노련, 현충련, 건설노련이 가세하였으며 1월 7일에는 방송4사를 포함한 언론노련 병원노련 등 공공부문이 대거 참여하였다. 민주노총 조합원 중 파업참가자수는 1월 3일~1월 14일까지 매일 20만 명을 돌파하여 총 169만 5천여 명에 이르렀다.

또한 한국노총은 14일부터 시한부파업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17개 연맹 1,648개 노조 422,450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가하였다. 이날 금융노련(한국노총산하)과 사무노련(민주노총 산하)이 연대집회를 열었으며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과 한국노총 박인상 위원장이 명동성당에서 만나 연대투쟁을 논의 하였다. 양대 노총은 이 논의에서 ‘날치기 노동악법 안기부법 무효화와 재개정촉구, 대선 때까지 투쟁의 연결, 전국노동자공동집회 개최, 국민협조 당부 등 5개항에 합의하였다. 이처럼 파업투쟁이 확대되고 있는 데 대해 김영삼 대통령은 1월 7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이 잘 몰라서 파업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비난하였고 검찰과 경찰은 민주노총 파업지도부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하고 강제구인을 시도하였다. 또한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는 한국노총을 방문하고 노동계에 대한 TV토론 제의, 여야영수회담 검토, 노동법 재개정 가능성 등을 시사함으로써 여론 무마와 시간끌기 작전을 구사하였다.

그러나 노동자의 총파업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연대는 더욱 확대되었다. 천주교 사제 862명은 1월 13일 87년 민주항쟁 이후 처음으로 시국성명을 발표하였고 기도회를 열었으며 연일 대학교수들의 항의성명이 잇따랐다. 특히 보수적인 학자를 비롯한 24개 대학 30여 명의 노동법 형법학 교수 들은 “이번 총파업은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저항권 행사의 하나로서 합법이며 노동법 개정안 무효화와 파업지도부 구속방침 철회”를 요구하였다. 그런데도 야당은 노동자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표시하지 않고 여야 영수회담 개최만을 요구하고 있었다.

1월 15일 총파업은 390개 노조 353,000여 명이 참가하여 12.26 이후 최대규모를 보였다. 이 시기의 파업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무전문직과 지하철 통신 등 공공부문이 모두 참가하였으며 1월 18일까지 참가자수는 90만 5천 명을 훨씬 넘어섰다. 민주노총은 신한국당 대표가 제의한 TV토론에 대해 ‘생방송과 권영길 위원장의 신변보장 요구’를 받아들이면 토론에 응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1월 18일 민주노총은 장기파업에 따른 조직역량을 고려하여 24일간 파상적으로 전개해왔던 총파업을 주1회 수요총파업으로 전환하고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월 18일부터 4단계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공동투쟁방침을 발표하였다. 양대 노총은 이 방침에서 ‘노동법개정 단일안을 만들 용의가 있다’는 것, 1월 25~26일에 100만 명 규모의 공동집회를 개최한다는 것, 신한국장 반대 1천만인 서명운동, 차량경적시위, 검은 리본달기 등 공동사업을 강력히 전개하며 공동행동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공동집회추진위원

회를 구성한다는 것 등을 밝혔다.

이에 따라 1월 26일 여의도에서 양대 노총 공동집회가 대규모 군중이 운집한 가운데 열렸으며 1월 22일에는 14만여 명이 참가한 수요총파업이 전개되었다. 한국 노총은 1월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3월 1일 이전에 날치기 노동악법을 무효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게 재개정할 것과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임단투와 연계하여 5월 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1월 17일까지 2,759명의 대학교수들의 시국성명이 발표되었고 범대위의 범국민서명운동에는 31만여 명의 국민이 참가하였고 매일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다.

이처럼 국민의 저항이 격화되자 김영삼 대통령은 종교지도자들과의 만남과 여야 영수회담을 거쳐 국민에 대해 사과하고 노동법재개정을 천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97.2.17, 임시국회가 소집되었고 여야 합의로 3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12월 26일 날치기 통과시켰던 4개 법안을 폐지하고, 4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